

보도시점 2026. 1. 20.(화) 10:00 배포 2026. 1. 20.(화) 08:00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TF에 요청
- TF는 앞으로 ①**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②**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③**대안신용평가 활성화**, ④**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 추진

【관련 국정과제】 59-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① 비금융정보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 구축, ② 대안정보를 집중·활용하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 1.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1.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25.12.19일)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되었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일시/장소)** '26.1.20.(화) 10:00 / 나이스평가정보 지하2층 컨퍼런스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전문가 9인,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은행연합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
  - (신용평가·데이터 전문가) 최대우(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 문영배(前 나이스평가정보연구소장), 정성규(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유경원(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수진(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 (소비자·법률 전문가) 최현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정성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논의내용)** ①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 ②대안신용평가 현황 및 활성화 과제, ③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현황·평가, ④신용평가체계 개편 TF 논의계획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하였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II. 주요 논의사항

### ① 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코리아크레딧뷰로)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최척 부장은 거시적 금융환경의 변화, 신용관리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 복합적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대상의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24년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의 한계, 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의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 ② 대안신용평가 현황·활성화 과제(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 구본혁 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대안 신용평가가 ①데이터 분석, ②동의 절차, ③시스템 운영, ④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의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다수의 동의절차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안정보 도입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③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과제(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아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 사가 산재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평가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여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여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릴레이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여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① 개인·대안신용평가체계 개편, ②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③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④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코리아크레딧뷰로)
- [별첨3] 대안신용평가 현황·활성화 과제(나이스평가정보)
- [별첨4]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현황·평가(한국신용정보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나운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사무관	신용진 (02-2100-2623)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지행호 (02-3145-7135)



## 1.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현황)** CB사는 신정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차주의 신용위험 가능성을 수치화한 개인신용평점을 산출·제공
  - '개인신용평점'은 차주의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중
    - \* 개인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점수화한 것
  - 금융회사는 대출실행, 카드개설 등 금융거래 개시·유지시 **CB사의 개인신용평점**을 참고하여 **대출승인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
- **(문제점)** 경제환경 변화\*, 해외사례 등을 감안, 기존 CB사의 개인신용평가 기준·방식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필요
  - \* 청년,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금융이력 부족인구 존재(약 1,236만명)
  - **(신뢰성)** 최근 5년간(19~24) 신용평점 900점대 이상 **고신용평점자 수** (1,723만명 → 2,216만명, KCB), 비중(36.3% → 44.3%)이 **지속 증가\*** 추세
    -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관리수단 확대, 코로나19 이후 신용사면 등 영향으로 전반적 신용평점 상승
  - **(공정성)** 금융정보, 불이익 정보 위주 **확일적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체계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균형있는 활용 부족**
    - \* 디지털기술의 발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비정형정보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금융권 정보 중심의 기존 평가체계 지속

➔ **(논의방향)** 개인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하고,

-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 2.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 **(현황)** AI·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금융권 신용평가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신용관리도 보편화
  - 금융권·CB사는 신용평가 예측력·변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형에 AI 활용을 확대\* 중
    - \*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축적된 행동데이터 기반 AI 신용평가 활용 (KCB) 소비자의 카드이용 상세내역(결제금액건수 등)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신용평가 제공
  - 또한, 마이데이터('22.1월 도입)는 기존의 신용정보 통합관리에서 벗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AI Agent 역할까지 나아갈 계획
    - \*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보유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리 행사하여 보유 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 가능
- **(문제점)** 경직적 동의제도로 인해 AI 등의 적극적 활용이 곤란하며 AI 활용에 따른 불투명성·책임성 문제도 제기
  - 사전적·개별적 동의제도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적시에 신용평가·신용관리에 활용되지 못함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AI모델 특성 등으로 인해 AI 활용 신용평가지 설명가능성·투명성 부족, 차별·편향 발생 우려

➔ **(논의방향)** AI 등이 신용평가·신용관리에 적시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체계 개선\* 논의

\*\* 예: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신용평가·신용관리목적으로 수집·활용시 포괄동의 허용

- 신용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AI 활용 신용평가 결과 설명의무 강화, 평가모델 외부검증 내실화와 함께 CB사의 신용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예: 신용평가 조직 구성, 평가요소 선정, 평가결과 검증·설명 등 신용평가 단계별 준수사항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의무화

### 3.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현황)** 대안CB 도입 등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안정보가 재량적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등 대안신용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개인CB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산출 모형은 금융정보 위주로 구성되며, 비금융정보는 정보주체 요청시 가점 요인으로만 활용
      - \* 예) NICE 개인신용평점 구성 : 상환이력 28%, 부채수준 25%, 거래기간 12%, 거래형태 28%, 비금융정보·마이데이터정보(증빙소득, 성실납부실적 등) 7%
    - 대안CB의 경우 금융정보 없이 비금융정보(예: 통신·모바일정보)만 활용하여 신용평가를 수행 중이나 금융권 활용은 저조
  - **(문제점)** 대안신용평가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분석 및 공급 기반이 미흡(공급측면)하며,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 활용 인센티브 부족(수요측면)
    - (데이터 수집) 관계기관 협조, 정보주체 동의, 비용문제 등으로 충분성, 정확성, 안정성 있는 대안정보의 확보 곤란
    - (데이터 분석) 금융회사 등이 확보한 대안정보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에 상당한 시간(4~5개월), 인적 자원 소요
    - (데이터 공급망) 금융회사들은 신규 대안CB와의 전산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CB망 이용 선호
    - (활용 인센티브) 제2금융권의 표준 신용평점시스템(CSS)은 낮은 활용도로 인해 대안정보 등에 추가 비용을 투자할 유인 부족
- ➔ **(논의방향)** 양질의 대안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형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분석 절차 개선
- \* 예: 대안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센터 구축, 대안정보가 지속 축적되는 신용성장계좌 도입
  - 이와 함께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

## 4.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 **(현황)** 단일 라이선스였던 CB업을 평가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자 CB업 도입\*(20.8월)

\* '21년 이후 5개사가 신규 진입하여 13개사 → 개인·기업신용평가 겸영(8), 카드사(4), 전업(1)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수집이 어려운 사업장(기업) 정보보다는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기반하여 금융정보 위주로 평가

\* 예) KCB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구성 : 상환이력 35.8%, 개인대출정보 21.5%, 개인카드정보 22.5%, 사업자대출정보 11.7%, 사업자개요 8.6%

- **(문제점)** 현행 소상공인 신용평가는 영업의 안정성, 미래 성장성 등 사업장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유망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약

\* 현행 신용평가는 과거 이력 기반으로 이루어져 매출 증가, 고객 평판 등 '미래 성장성'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창업 초기, 재기 소상공인의 재기·도약기회 차단

- 대표자 개인 외에 사업장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영업현황을 파악 가능한 비금융·비정형정보의 활용도 미흡\*

\*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e-커머스 등 정보 보유기관의 협조 부족 등으로 활용 곤란

- ➔ **(논의방향)** 산재된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하여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를 구축하고,

\* 예: 세금 납부정보(국세청), 카드매출(카드사), 상권 유동인구(통신사), 리뷰평점(e커머스) 등

- 금융정보 외에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 개발·활용 필요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TF('25.8월-) 논의와 연계 추진